

# 김원욱 헌법

기본기출반 복습 01~03 종합해설



일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가속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 06. 30 [수]

담당 : 김 원 욱 교수

cafe.naver.com/wonwook2021

01. [정답] ①

[해설]

① (X)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유 능력을 말하며, 기본권 보유능력이 있다고 모두 기본권 행사능력 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 국민인 미성년자는 기본권을 보유하지만 선거권에서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02. [정답] ②

[해설]

② (X)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 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03. [정답] ④

[해설]

④ (X)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3. 9. 26)

04. [정답] ②

[해설]

② (X) 초기배이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05. [정답] ③

[해설]

③ (X)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06. [정답] ②

[해설]

② (X) 초기배이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07. [정답] ④

[해설]

④ (X)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08. [정답] ③

[해설]

③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에게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계약의 자유 및 수익자의 재산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나, 위와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수익자의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주> 이익형량으로 상위기본권을 우선시킬 수 없으므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09. [정답] ④

[해설]

④ (X)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 복합적인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한다. <주>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라 기본권의 경합이다.

10. [정답] ④

[해설]

④ (X)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의 기초이자 집단적 단결권의 전제가 되는 반면에, 집단적 단결권은 개인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조직·강화된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단결권이든 집단적 단결권이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11. [정답] ④

[해설]

④ (X) 비록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들에게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은 국가가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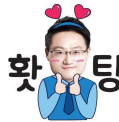
12. [정답] ①

[해설]

① (X)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국가가 일정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 김원욱 헌법

기본기출반 복습 01~03 종합해설



일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랑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가속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 06. 30 (수)

담당 : 김 원 욱 교수

cafe.naver.com/wonwook2021

13. [정답] ③

[해설]

③ (X)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4. [정답] ④

[해설]

④ (X)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할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반입 금지품을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4헌마 826)

15. [정답] ④

[해설]

④ (X)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16. [정답] ③

[해설]

③ (X)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17. [정답] ④

[해설]

④ (X)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고지의 허용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등)

18. [정답] ③

[해설]

③ (X)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19. [정답] ①

[해설]

①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20. [정답] ①

[해설]

① (O)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7. 6. 29. 2015헌마 654)

② (X)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450)

③ (X)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

④ (X)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항은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LPG승용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